

文 “문서상 서명 아니지만 ‘적대관계 종식’ 선언한 셈”

대통령, 국무회의

남북·북미 행동으로 평화시대 선언
한미 대통령 DMZ 방문 ‘사상최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 45분쯤 비무장지대(DMZ)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진행된 남북미 정상간 역사적 첫 만남 관련 “남북에 이어 북미간에도 문서상 서명은 아니지만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지난 일요일 우리 국민들과 전세계인들은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봤다. 정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두 손을 마주 잡았고, 미국의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북한 정상의 안내

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어질 북미대화에 있어서 늘 그 사실을 상기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화의 토대로 삼아 나간다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이 맺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 정상간 역사적 첫 만남이 상상력의 산물임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를 감동시킨 북미 간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SN 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파격적인 제안과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으로 이뤄졌다. 그 파격적인 제안과 과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며 “기존의 외교문법 속에서 생각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 상상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고, 감동시켰으며, 역사를 진전시킬 힘을 만들어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달 30일 DMZ 내 최전

방 GP(경계초소)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서는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함께 DMZ를 방문한 것은 사상 최초”라면서 “국민들께서 의미 있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양국 대통령이 군복이나 방탄복이 아닌 양복과 넥타이 차림으로 최전방 GP를 방문한 것도 사상 최초”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40km 거리의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민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있고, 서울에만 10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상황을 설명했다”며 “아울러 눈앞에 빤히 보이는 개성공단이 남북경제와 우리안보에 가져다줬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지난달 28일 오후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하반기 1호 발의 법안 ‘물류정책 기본법’

자치단체 물류 자율성 확보 등 취지
증기 취업청년 세 감면 등 총 20건

을 상반기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썼던 20대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의정 활동 기간인 하반기 첫날 20건의 입법안을 발의했다. 하반기 첫 발의안 중 경제 관련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은 주로 자유한국당에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의안 분석결과, 올 하반기 처음으로 국회에 등록된 법안은 이현승 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류정책 기본법’ 개정안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물류정책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 물류기본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현행법상 특별시장·광역시장은 5년

마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마저도 정부가 작성한 수립 방법 지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자체가 정부 규정에 따라 계획을 세워도 결국 정부승인 없이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국토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토뿐 아니라 해양 산업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또 지자체가 수립·변경한 기본계획은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아 지자체가 인프라(시설기반) 확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확대

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상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5년동안 90%까지 감면한다. 다만 중견기업에 취업했던 청년이 경제·경영 악화로 회사가 중소기업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 한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이 중견기업에 들어갔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받는 기간동안 회사가 중소기업으로 바뀌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임이자 의원의 경우 환경산업연구단지가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다른 기업체 등에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한국당, 민주·바른미래당과 韓日교류 추진

나경원 “경제전쟁 확대 우려”

일본의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한국 수출 규제에 자유한국당은 무역 보복 해결을 위한 조당 차원의 한일 교류 추진에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전날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수출 규제에 대해 “한일 간 경제 전쟁까지 확대가 우려된다”며 “긴급 한일 교류를 더불어민

주당·바른미래당과 함께 추진해보겠다”고 알렸다.

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제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다”며 “우호적이지 않은 관계는 한미일 삼각 공조와 동북아, 일본의 경제에도, 평화 안정에도 결코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대법원이 강제징용 판결을 낸 이후 지난 8개월여 동안 일본 정부는 계속 통상 보복을 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했는데, 외교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그저 방관했다”며 “감정외교·갈등외교가 가져온 외교참사”라고 지적했다.

/석대성 기자

輿野, 오늘부터 릴레이 대표연설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확정
3일간 연설… 9일 대정부질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복도에서 조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나지만, 한국당은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논란과 교과서 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완전한 국회 정상화’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현안에 대해) 국회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다운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만간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북한 동력선 입항 관련 허위보고·은폐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합동조사단 발표만 내세우면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강조했다.

/석대성 기자

상반기 식품산업 키워드 ‘건강기능식품’

농식품부, 언급빈도 2803회

적에 대한 언급이 많았으며, 푸드 테크는 새로운 기술 및 정부 정책지원을 주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건강·간편성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과 가정간편식에 대한 언급이 지난해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3개 키워드에 대한 호불호·가치판단이 포함된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에 분석 결과 모두 긍정적인 비중이 부정적인 비중보다 높았다.

다만 푸드 테크의 경우 중립어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신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석대성 기자

올해 상반기 빅데이터로 분석한 식품 산업 주요 키워드는 건강기능식품, 가정간편식, 푸드 테크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올해 1~5월 네이버에

오른 식품산업 관련 뉴스 가운데 언급 빈도가 월평균 1000회 이상 다빈도 주제어를 선정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언급빈도로는 기능성 식품이 월평균 2803회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가정간편식 2518회, 푸드 테크 1356회 순이었다.

연관어 분석에서 기능성 식품과 가정간편식은 소비자 관심과 제품 이용 목